

# 태국의 노동자 이해대변 확장

Aranya Pakapath (태국 화학노동자연맹(CWUA) 연구원)

## ■ 경제 동향

지난 수십 년 동안, 태국은 중위소득 국가로 성장하며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전환했다. 1997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로, 태국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촉진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등의 업종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난 20년 동안 태국의 주요 산업부문으로 자리잡았다. 2013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1일 300바트)과 같은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업부문의 성장 덕분에, 근로자의 임금과 숙련도 향상되었다.

한편, 섬유 및 의류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에는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국가들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면서 태국의 인건비 상승을 비롯한 여러 변화들에 대처하여 왔다. 생산시설을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대미국 및 대EU 수출 시 특정 개발도상국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를 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와 전자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써 태국은 2012년 자동차 생산량이 245만 대로 세계 10위(Nikkei Asian review, 29 December 2016) 자동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으나, 이 산업부문들이 향후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로서의 태국은 경제 발전을 통한 기술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임금만 인상되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태국은 더 이상 '낮은 노동비용'을 경쟁력 요인으로 삼을 수 없는 데 반해, 경제 발전의 주요 동인인 기술 혁신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은 중진국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

태국의 주요 경제정책은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의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 더욱 성장하게 함으로써 '중진국 함정'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 발전 전략은 10개 부문을 목표 대상으로 한다. 농업/생명과학, 식품 가공, 고급 웰니스 관광(affluent and wellness tourism), 스마트 전자, 차세대 자동차 등 기존 5개 산업부문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발 계획은 혁신과 첨단기술에 핵심을 두고 있다. 이와 동시에 태국 정부는 디지털, 로봇공학(robotics), 의료 허브(medical hub), 항공/물류, 바이오 연료(biofuels)/생물화학(biochemical) 등의 5개 신생 부문을 개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일부 산업의 경우, 정부는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 EEC)' 내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고, 정부가 지정한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특정 장벽을 제거하고 다른 국가들의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제도와 유사한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산업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EC에는 라용(Rayong), 촌부리(Chonburi), 차췁사오(Chachoengsao)라는 동부의 3개 지역이 포함된다. EEC 프로젝트는 향후 5년간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약 430억 미국 달러 수준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정치 상황

정치적으로는, 2013~14년의 정치 위기에 이어 2014년 5월에 군사 쿠데타가 발발하였으며, 이는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을 위해 일어났던 군사 쿠데타 이후로 열두 번째 군사 쿠데타였다.<sup>1)</sup> 2013년 11월, 친국왕정당인 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2011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

1) 편집자 주: 태국의 정치적 대립은 친국왕파인 노란셔츠(Yellow Shirts)와 친탁신파의 붉은셔츠(Red Shirts)의 대립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당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일련의 반정부 부시위가 지속되면서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라왓 당시 총리가 총리직을 상실하고 이후

둔 친탁신정당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의 잉락(Yingluck) 정부에 대항하고자 정치 개혁을 감독하기 위해 선거를 거치지 않은 국민위원회 수립을 통해 전국적으로 세력을 집결하고 정치적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민주개혁위원회(People’s Democratic Reform Committee: PDRC)’를 발족하였다. 이에 맞서, 친탁신파(pro government)인 ‘붉은셔츠’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친탁신파(친정부)와 친국왕파(반정부)가 충돌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잉락 정부는 2013년 12월에 하원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 2월에 총선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친국왕파(반정부)는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거는 실시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자체 권한으로 선거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뒤이어 잉락과 장관들의 지위를 박탈하였다.

현재까지 태국은 여전히 군사정부, 즉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와 국가입법회의(National Legislative Assembly)를 구성한 ‘국가평화질서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 NCPO)’가 집권하고 있다. 1932년 이후로 스무 번째인 신설 헌법은 군사정부가 임명한 헌법초안위원회(Constitution Drafting Committee)에 의해 작성되었다.

## ■ 민영화

현 태국 정부는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50년 동안 태국에 전력 공급을 담당하였으며 태국의 경제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태국의 최대 국유기업인 ‘태국전력공사(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EGAT)’는 또 다시 기로에 놓여 있다.

2015년 국가개혁위원회는 태국전력공사에서 전력 송출 및 통제 센터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전력산업 개혁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전력산업 개혁 움직임은 10년 전 이전 정부의 민영화 계획과 유사하다.

2018년 1월 9일자 ‘방콕 포스트(Bangkok Post)’가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자원부 장관

군의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은 “에너지 부문은 지난 수십 년간 에너지 안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제는 경제의 기타 부문에 맞추어 효율적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규제 완화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새로운 ‘국가전력개발계획(PDP)’을 통해 확정될 것이며, 이 계획은 현재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계획은 공정한 시장 건설을 목표로 하며, 민간 전력 생산업체들에 주어졌던 태국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의 특혜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시리차이 마이닝감(Sirichai Mai-ngam) 태국전력공사(EGAT) 노조 위원장 인터뷰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임 에너지장관은 민간 전력생산업체의 전력 생산을 증대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현재 태국전력공사와 민간전력생산업체의 전력공급 비율은 40:60(16,000MW:26,000MW) 정도 수준이다.

13년 전인 2004년, 정부가 태국전력공사의 지위를 국유기업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태국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민영화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2006년 민영화반대집단이 제기한 소송 이후 행정법원의 명령에 의해 폐기되었다. 행정법원은 태국전력공사 민영화를 위한 2개 정부 법령의 타당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태국전력공사 지분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민영화 계획이 실패하자, 정부는 몇몇 규정을 변경하여 민간 기업이 전력산업에 진입해서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취했다. 태국전력공사의 발전소 2개도 민영화되었다.

이후 민간전력공급자의 수가 늘어났고 현재 태국 전력 공급의 60%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태국전력공사가 수명을 다한 오래된 발전소를 대체할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지 않는 형태로도 전력산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에너지부의 에너지정책계획청과 에너지규제위원회(ERC)는 15년 전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8년 3월 이 계획 초안이 발표되며 이후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 계획에 향후 3~5년간 개발될 새로운 발전소 위치와 전력 생산비율과 에너지원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

‘강화된 단일 구매자(enhanced single buyer)’ 제도하에서, 태국전력공사는 민간 전력생산자들이 생산한 전력의 단일 구매자로서 전력구매협약을 체결한다.

재생에너지는 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이다.

공공부문에 속해 있고 태국전력공사에 의해 운영되는 전력그리드, 송전시스템, 콘트롤센터 민영화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기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태국 전력공사의 책임을 고려했을 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 노조의 대응

2018년 1월 17일, 태국전력공사 노조는 태국전력공사 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전력산업 개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7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태국전력공사 근로자들과 언론이었다. 이어 1월 18일에 태국전력공사 노조는 총리와 에너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노조는 전력 공급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정부의 개혁 계획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일부 민간 생산자들이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는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전력생산능력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의 투명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에너지부 장관은 태국전력공사의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태국전력공사가 국민들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갖는 국영기업으로 유지될 것임을 확약했다.

노조는 정부의 계획을 계속 주의해서 관찰할 것이며 진행되는 개혁이 국가와 국민 전체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 무인 공장 시스템

무인 공장 시스템은 '원격운영센터(Remote Operating Centre)'를 활용하여 생산 공정을 통제하는 새로운 공장 기술을 가리킨다. 이러한 첨단 작업장 모형은 산업가스 부문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2014년,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 산업가스 기업인 린데(Linde)는 말레이시아 샤아람(Shah Alam)에 지역 운영센터를 신설하여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 10개국 55개 공장의 산업가스 공정을 관리하였다.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의 운영센터가 관리하게 될 생산 공장은 11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 노동시장

태국은 3,800만 명의 노동력을 갖춘 동남아시아의 제조업 및 무역 중심국이다. 3,800만 명의 노동력 중 1,691만 명은 고용관계를 맺고 있으며, 2,141만 명은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출신인 이주노동자 약 300만 명이 어업, 식품, 건설, 자동차, 섬유/의류, 경비 및 청소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 세계의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태국에 생산시설 및 기타 공정을 두고 있다.

노동수요의 차원에서 보면, 물류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약 650만 명에 이른다. 소매 전자상거래, 창고업 및 운수업이 확대되면서, 대형 화물트럭 기사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태국 경제의 원동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태국산업연합회(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산하 자동차산업클럽(Automotive Industry Club)에 의하면, 자동차 산업의 고용규모가 가장 크며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약 70만 명으로 그중 20%는 이주노동자라고 한다. 전자 및 가전산업도 태국 제조업의 중요한 산업으로, 2,300개가 넘는 기업에 약 50만 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다.

관광업 종사 근로자의 수는 약 60만 명에 이른다. 상무부의 정보에 의하면, 청소업 또한 임시직 및 정규직을 포함하여 60만~70만 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주요 부문이다. 현재 태국에는 2,600개가 넘는 청소업체들이 등록되어 있다. 이 업체들은 대부분 18-55세의 여성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가 이 업종 전체 노동력의 약 10%를 차지한다. 대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업은 기업 규모별로 대, 중, 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병원, 정부 기관, 공항, 호텔, 백화점, 대학, 공장, 회사 사무실, 주방이나 음식점, 유흥시설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다.

노동부 상임비서실 산하의 국가노동정보센터(National Labour Information Center)에 따르면, 또 다른 성장 산업인 석유화학 및 화학산업에는 2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섬유산업에는 15만 6,924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에는 약 1,670만 명(태국 전체 인구의 약 25.9%)이 종사하고 있다.

## ■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조의 대응

태국의 ‘국영기업근로자총연맹(State State Enterprise Workers’ Relations Confederation of Thailand: SERC)’은 태국 정부가 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여 왔다. SERC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증진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권과 개발 재단(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undation: HRDF)’과 제휴하여 2009년 태국의 약 200만 명 이주노동자에게 산재보상기금 지급권이 없다는 내용으로 동등 대우(ILO 협약 제19호 재해보상에서의 균등처우협약) 관련 진정을 ILO에 제출하였다. 그 이후로, 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비정부단체와 SERC이 수년간 진행한 이러한 캠페인은 성과를 가져와, 현재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상해/질병, 장애, 사망, 출산, 아동급여, 노령급여 및 실업급여 등이 지급되는 태국 사회보장기금(1990년 사회보장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태국 북부에 위치한 치앙마이(Chiang Mai)에서는 2008년에 공장, 건설, 가사업무/청소, 농업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이 결집하여 ‘이주근로자연맹(Migrant Workers Federation:

MWF)’이라는 노동자단체를 설립하였다. 이 연맹의 주요 목표는,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여 그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와 태국 내국인 근로자 간 연대를 형성하며,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동등한 권리 및 이러한 권리의 이행을 촉진하고, 노동권, 아동의 권리, 여성의 권리, 직업, 언어 및 근로자 문화에 대한 정보 센터를 구축하는 데에 있다. 현재 이 연맹에는 400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남녀의 가입 비율이 같다. 업종별로는 80%가 건설업, 10%가 음식점, 택배/기사, 경비, 가사, 매장 보조, 농업 등의 서비스 부문에 속한다. 나머지 10%는 의류, 섬유 및 제과(비스킷) 등의 공장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연맹의 연회비는 360바트(한화 약 12,000원)이다.

태국 동부에 위치한 사무트사콘(Samut Sakhon)의 경우, 태국 의류수출기업(Thai Garment Export Ltd.)의 공장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의류 노조는 대량 해고로 인해 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탈퇴하게 되자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영입하였다. 이 노조는 사회보장급여를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가혹 행위 및 기타 유형의 차별 행위 발생 시에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방콕의 남부에 위치한 사무트프라칸(Samut Prakan)에서는, 태국농식품유한공사(Thai Agri Food PCL)의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식품 노조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조합원의 약 절반이 이주노동자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요율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 ■ 산업가스 부문의 노조 조직화 사례

### 태국의 노조 현황

태국의 노조들은 과반수가 공장이나 기업 단위로 조직화되어 있다. 1975년 노사관계법에 따라, 노조는 동일한 사용자를 위해 일하거나 동일한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이상으로 설립될 수 있다. 또한 동법에 의해, 노조는 사용자와 근로자 및 근로자 간의 우호적 관계를 촉진하고 근로조건과 관련된 이권을 추구하고 보호한다는 목표를 기술한 노조 규약을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조 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시설, 유통/운수와 기타 업무 분야에 파견 근로자를 비롯한 계약직 고용을 늘리는 반면에 정규직 직접 고용은 줄이고 있다.

## 태국 산업가스노동조합(TIG LU)

태국 산업가스노동조합(Thai Industrial Gases Labour Union: TIG LU)은 노동부에 노조 규약 개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규약 개정은 조합원 가입 범위와 관련된 것이었다. 2007년에 이 노조는 태국 산업가스유한공사(Thai Industrial Gases PCL)의 유통 부문과 함께 청소업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신규 조합원으로 조직하였다. 청소 부문은 외주 계약을 통해 용역업체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통 부문의 일부도 외주 계약을 통해 운영되어 왔다.

이 노조는 민주적 노조 대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투표를 통해 태국 산업가스 기업의 생산시설 종사자 외 근로자들을 신규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조직하기로 결의한 후에, '산업가스 사업의 공급 체인에 속하는 근로자'가 노조 가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조 규약의 노조 가입 범위 조항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노조의 규약 개정 요청은 노동부에 의해 반려되었다. 노동보호 및 복지국 국장에 의하면, 노동부가 발송한 2008년 1월 30일자 서한은 다음과 같다.

“조합원 모집은 노조 등록을 원하는 이들과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들 또는 그들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첫 번째 조항을 고려할 때, ‘조합원은 (사라부리 지방의) 탈란 현장에 배치된 태국 산업가스공사의 근로자 또는 태국 산업가스유한공사의 근로자여야 한다’는 조항을 ‘조합원은 산업가스 사업의 공급 체인(supply chain)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여야 한다’로 노조 규약을 수정하겠다는 TIG LU의 요청에서 ‘공급 체인 사업(supply chain business)’이라는 용어는 (노조가) 다른 유형의 사업에 속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영입하고자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노조 조직이 노조 등록에 관한 노동법에 의해 허용된 유형/형태의 노조 조직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TIG LU의 노조

조직 범위 개정 요청은 1975년 노사관계법 제95조와 88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노동보호 및 복지국의 법률 자문에 의하면, 파견근로자인 PC 전력 근로자들을 TIG LU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상술한 노동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노동부의 이러한 법률 해석에도 불구하고, TIG LU는 계속해서 파견근로자인 청소 및 유통/화물운전 종사자들을 새로운 조합원으로 모집하였고, 그들의 단체교섭권을 위해 투쟁하였다. 또한 동등한 권리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단체협약도 체결하였다. 한때는 파견근로자로 채용되었던 유통 부문의 조합원들이 이제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어 있다.

전임 TIG LU 위원장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이며, 태국은 1919년 ILO 창설 당시부터 회원국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우리 노조는 국제통합제조노련(IndustriALL)과 ‘내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해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고 가르쳐준 한국 노조 지도자들로부터 배운 것을 실행에 옮겼을 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 ■ 지역 이익대변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체인 확산과 관련하여 한국 노조들과 연대하고 공동의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

### 사위트 캐워반(Sawit Kaewvarn) 태국 국영기업근로자총연맹(SERC) 사무총장 인터뷰

단기 계약직, 도급 및 파견근로자 사용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정책 중 하나다. 때로는 이러한 관행을 세계화에 동반되는 유연한 고용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세계화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불안정한 고용이 확산되면서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 불안정한 생활과 생계, 삶의 질 하락 등의 더 높은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한 정책들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공동 투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조 운동을 재정립하고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선제

---

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함께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불안정 노동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담론 및 정책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제도와 메커니즘 모두)과 이를 제공하고 활성화하는 자본주의자 및 정부들을 공격하여야 한다.

노동운동은 사고 방식, 투쟁 경험 및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근로자는 형제자매'라는 강력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역사적인 여정과 책무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하며, 강력한 노동운동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동운동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시스템'에 맞서 싸워나가면서, 우리의 목표와 목적에 대한 교육 활동을 통해 젊은 조합원들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더욱 강력한 세력 결집과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식과 관점의 형성 및 분석을 위한 교육은 중요한 활동이다. 교육의 주제를 연구, 탐색, 제시하는 연구자들은 노조와 근로자의 관점 및 지식을 심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대규모 조직화에 필수적인 '의식 제고(consciousness raising)'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양한 국가들의 현안과 상황에 대해 상호 교류하고 이해하기 위한 포럼도 유용하다. 여기에는 경험과 전략, 성공 및 실패 사례, 습득한 교훈의 교류가 포함된다.

또한, 시스템을 공격하고 이러한 해악을 공론화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동시에 공동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변화와 함께 근로자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기 위한 장기적 캠페인을 위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실무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2017년 11월, 태국의 노조 대표들은 민주노총(KCTU)의 초청으로 2017년 11월 8~13일에 서울에서 개최된 LEAP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태국의 금속 및 보건 부문 노조 활동가 6명은 한국뿐 아니라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의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온 조합원들과 경험을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태국 간호사노조(NUOT)의 대표로 참가한 푸니사(Poonyisa)는 LEAP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는 한국의 강력한 노조운동의 투쟁 활동, 역사 및 동향에 대해 배웠으며, 특히

---

근로자의 연대가 지니는 의미, 다양한 업종과 직종의 근로자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취하는지 알게 되었다. 근로자들의 집단 행동의 목적은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착취에 맞서 싸우는 데 있다.

모든 근로자는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 안정을 갈망한다. NUTO도 이러한 이슈를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태국 공립 병원 간호사를 대표하는 우리 조직은 태국 정부에 간호사와 공공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타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정책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간호사를 비롯한 공립 병원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권리 인정을 위해 싸우고 있다. 노조 활동 및 조직화 캠페인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한 한국에서의 연수는 큰 도움이 된다. 교실 수업 외에 사업장 방문과 집회 및 현장의 조합원 방문을 통해 많은 영감을 얻었으며 노조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KLI**